
정책참고자료

2016-1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침수·가뭄·급경사지 재해정보 통합 서비스 개시	—————	4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2
3	기획재정부		
	일자리사업 15.8조원 전면개편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19
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 촉구	—————	22
5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술창업 펀드’ 1,500억원 규모로 편성	—————	26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	30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에 활력과 농촌주민에게 생기를 주다	—————	32

8 환경부

12곳 생태관광지역 마을주민 자매결연 맺어 _____ 36

9 고용노동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로 확대!! _____ 44

10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CEO 포럼 _____ 78

1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_____ 82

12 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의 모든 것, 업계에 직접 알려준다 _____ 87

침수·가뭄·급경사지 재해정보 통합 서비스 개시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러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침수·가뭄·급경사지 재해정보를 9월 1일부터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함으로써 재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 국민안전처는 2015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사업비 9억 원을 들인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여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됨
 - 그 동안 침수·가뭄·급경사지 재해정보는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별로 각각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 침수 : 침수흔적도(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예상도(국토부, 해수부), 재해정보지도(지자체)
 - ※ 가뭄 : 강우정보(기상청), 댐정보(수자원공사), 저수지정보(농어촌공사)
 - ※ 급경사지 : 계측기 및 CCTV정보(지자체), 지질정보(지질자원연구원), 지반정보(건설기술연구원)
 - 예를 들면, 강우정보나 침수흔적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만 했었다.
 - 하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침수·가뭄·급경사지 재해정보를 통합해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NDMS)에 1회 접속만으로 이 모든 재해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 통합연계기관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재해지도가 연계됨으로써 침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침수흔적 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민안전처 등에서는 기상청의 강수량 정보와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량 정보 및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저수량 정보 등이 실시간 연계됨으로써 가뭄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별 재해지도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산림청,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는 급경사지 계측기 및 CCTV 중앙 연계를 통하여 시설점검 및 이력관리 등 급경사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일반국민들은 국민재난안전포털(PC) 및 안전디딤돌(모바일)을 통해서 대피소, 대피로 등이 표시된 재해정보지도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보 등을 제공 받음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분야	서비스 내용
침수	침수흔적지도, 침수예상지도, 재해정보지도 제공,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가뭄	강수정보, 댐·저수지정보 제공, 가뭄전망, 각종 가뭄지수 조회
급경사지	지질·지반정보, 급경사지 계측정보 및 CCTV정보 제공

□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재해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례1]

OO군 OO읍에 OOO씨는 새로 이사를 가는 지역이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을 구하기 위해 OO군청을 방문하여 침수흔적확인서를 신청 하였다. 민원 담당자 OOO 주무관은 침수가뭍급경사지정보시스템의 '침수확인서발급' 기능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해 침수여부를 확인해 주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통하여 OOO씨는 침수 피해가 없는 집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OO군수는 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침수흔적도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2]

OO면 면사무소 안전총괄 담당자는 급경사지 정보 수정 삭제 시 기존 정보가 남지 않아 수기로 관리해야만 했던 급경사지 위험등급 변경, 관리주체 변경 등의 이력 정보를 침수가뭍급경사지정보시스템의 급경사지 정보관리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관리 기능을 통해 연도별 급경사지 변화 추이와 위험등급별 급경사지 개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계측정보관리, 주민대피 및 지반재해정보 관리 기능을 통해 급경사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OO군 재난방재과에서는 웹GIS에 표출된 급경사지 계측지점의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급경사지의 붕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신속하게 출동 및 조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용주체	제공정보	제공내용	제공방법 및 활용
일반국민	재해정보지도	대피로, 대피소, 대피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방법)국민안전처 대국민 서비스 포털시스템에 연계하여 위험정보 제공 · 국민재난안전포털(PC) · 안전디딤돌(모바일) - (활용)침수 및 붕괴위험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 확보
	급경사지	- 붕괴위험지역	
기관	재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흔적도 - 침수예상도 · 지진해일침수예상도 · 폭풍해일침수예상도 · 홍수범람위험도 - 재해정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방법)침수가뭍급경사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정보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 - (활용) · 국민안전처 : 재해지도 체계적 관리, RDI(실시간가뭍지수)를 통해 가뭍종합판단을 · 지자체 :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활용한 재해정보지도 작성,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 유관기관 :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한 시설점검 <p style="margin-top: 10px;">*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관리기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p>
	가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수문 정보 · 강우량 관측정보 · 댐 관측정보 · 저수지 관측정보 - 가뭍 지수 정보 · 실시간가뭍지수(RDI) · 표준강수지수(SPI) · 파머가뭍지수(PDSI) - 기타 가뭍 정보 · 상습가뭍재해지역 · 제한운반급수지역 	
	급경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지반정보 - 급경사지 계측정보 - 급경사지 CCTV 정보 	

○ 연계정보(침수, 가뭍, 급경사지) 및 연계기관(10)

연계정보		연계기관	비고	
침수 (재해지도)	침수흔적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예상도	홍수범람위험도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폭풍해일침수예상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지진해일침수예상도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재해정보지도	지자체		
가뭍	강우 정보	기상청		
	저수지 저수 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댐 저수 정보	한국수자원공사		
급경사지	지질정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반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측정보	지자체		
	CCTV정보	지자체		

□ 시스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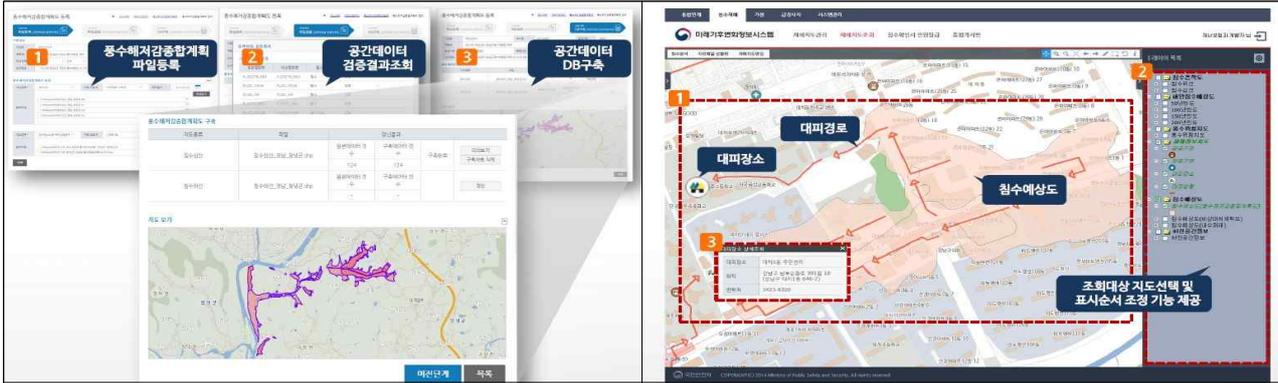


①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NDMS)에 탑재된 ‘침수가뭍급경사지 정보시스템’ 화면



② 침수가뭍급경사지 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통합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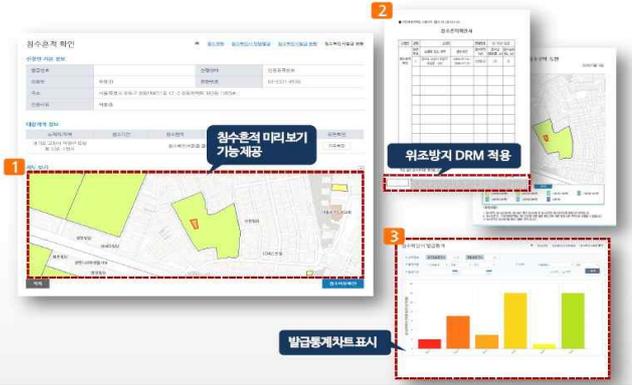


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재해지도 연계

② 주민대피 요령을 표시한 재해정보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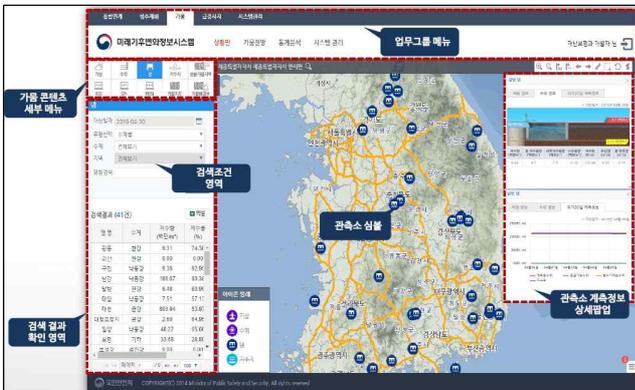


③ 각종 재해지도 연계



④ 침수흔적도 발급시스템 구축

□ 실시간 연계데이터(기상수문정보) 기반의 실시간가뭄지수(RDI)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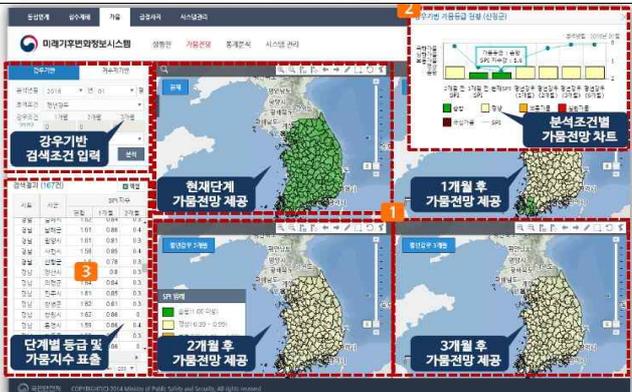
① 가뭄 현황판



② 강우, 저수지 기반 가뭄전망



③ 실시간가뭄지수(RDI) 조회



④ 강우기반 가뭄전망

□ 모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① GIS기반 급경사지 현황 관리

② 점검 이력관리 기능 제공

③ WEB기반 급경사지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④ 연구성과물을 활용한 위험도 분석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이 94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집중 신고대상은 ① 연구개발(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⑧ 기타 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이다.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 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 110'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분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 붙임 :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분야별 사례
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

-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과제명만 달리하여 신규 과제로 신청,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와 무관한 자사 물품구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전자, 통신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A 업체 대표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건의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받은 45억여 원의 정부 출연금 중 20억여 원을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
- (주)B 업체 대표이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외 다수 기관에서 진행한 R&D국가과제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 밀어주기, 보고서 허위작성, 회사운영비로 유용, 허위견적으로 정산처리, 다른 회사의 장비와 제품을 무단 도용,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억 4천 2백여 만 원을 횡령

② 어린이집 보조금

-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아동의 시간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A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아동의 시간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으로 총 1억 5천 1백여만 원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B 어린이집 원장은 2011.~ 2015. 3. 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과 보육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 2억 2천 8백여 만 원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③ 요양 급여

-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요양병원 원장은 고령의 의사들이 실제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5억 7천 9백여 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B 요양병원 대표자는 요양병원 입원료 간호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입원병동 간호인력 근무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운영하거나, 미근무자나 원무과 직원을 입원병동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비상근 간호인력에게 상근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 3천 5백여 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④ 복지시설

-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A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공용차량 사적 사용, 인건비 편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후 리베이트수수, 후원금 및 후원물품 개인착복 등으로 총 4천 5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 B 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산하 C 자립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으로 채용된 D씨를 2012. 10월부터 2014. 12월까지 B 복지법인 행정업무를 맡게 하고, 이로 인해 C 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총 4천 9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5 농업 보조금

- 공사금액 부풀기, 자부담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비닐하우스 시설 농작물 재배 농민들은 2013. ~ 2014.까지 2년간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공업체와 담합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계약액을 부풀리거나 농가 자부담금을 과다 보고하는 등으로 총 10억 2천 7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 농업인인 A는 LED 이용시설 원예시범사업 시설자금 6,000만 원을 보조 받아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B군내 농민은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쌀농사를 지으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총 132만 원을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6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부정수급

- (주)A 근로자는 B사에 11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입사하여, 자녀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총 4백 5십여 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 (주)B 근로자는 자진퇴사인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해고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5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7 유가보조금

- 화물차 유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주)A 주유소 대표는 화물차 지입차주 B와 공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주유소에서 실제로 주유한 양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관할관청에 부풀려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억 1천 1백여 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
- B 화물차 지입차주는 주유소 대표와 결탁하여,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으로 카드결제하는 방법으로 3년간 총 2억 4천 1백여 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

□ 기 타

- 사무장 병원, 각종 중소기업지원금, 대학지원보조금, 버스보조금, 보훈단체보조금, 전통시장육성사업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금, 환경·해양수산 보조금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2016.9.1. ~ 11.30.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복지분야, 농축임수산분야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상담 국번 없이 110

팩 스 044) 200-7972 **스마트폰앱** "부패·공익신고" 앱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음



**일자리사업 15.8조원 전면개편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경쟁력 상실 사업장, 직접일자리 지원을 축소하고 근로자 역량 강화, 취약계층 고용 촉진, 정보시스템 선진화 부문은 강화
 - ◆ 10% 수준(1.6조원 내외)의 일자리사업 재편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
- 6.28(화)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가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함
 - 정부 일자리사업은 '기업 지원, 묵은 일자리 보호'에서 구직자·전직희망자의 역량개발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사람 지원' 원칙으로 재편하는 한편,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업 개편을 통해 시장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 정부 일자리사업 : 25개 부처(청), 196개 사업('16년 예산 15.8조원)

- 논의된 주요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고용장려금 중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은 축소하되,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과 EITC(근로장려금) 지속 확대

-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인 창업 성공 패키지와 재기지원패키지로 재편해 창업위험 감소
- 직접일자리 비중은 경기상황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축소
- 시간선택제와 일·가정 양립(대체인력 지원 등) 지원 확대

② 고용센터는 일부센터 민간위탁(기업대상업무 제외), 책임경영 등 조직 혁신

- 공공과 민간의 경쟁 도입, 센터장 민간 공모 등 성과중심 운영

③ 직업훈련은 재량적 규제와 가격·물량 통제를 축소하고 엄격한 성과관리

-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사업은 취업률 등 표준 핵심성과지표로 통합관리

④ IT강국에 걸맞는 일자리 정보시스템과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

- '워크넷'을 공공 정보망 대표 브랜드로 하여, 부처별 고용·훈련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전달체계는 One-site, One-stop 원칙 하에 최초 창구 일원화

⑤ 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

- 각 부처의 유사·중복된 일자리사업 통폐합
- 사업의 성과, 중복여부를 주기적 조사하고 존속여부 결정

□ 심층평가를 통해 재편되는 일자리사업 재원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수준(1.6조원 내외)으로

- 이번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하여 7월 중 심층평가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및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

- * 정보시스템 연계 등 별도 절차가 불필요한 사업은 바로 조치

-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는 지난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

-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직접 검토에 참여하여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을 마련하였으며 대상별 매트릭스 분석 및 수요자 설문조사 등 심층 분석이 실시되었음

-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25개 일자리 관계부처는 T/F를 구성하여 개편방향 논의, 평가자료 제공 등 심층평가를 적극 지원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 촉구

▶ 지방교육재정 보강,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추경예산안 처리 촉구

- 교육부(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안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해소 지원 및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 금년 추경은 내국세 증가분 등 약 11조원을 연내에 투입하여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 특히,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추경에 반영된 교부금 증액분 1.9조원은 금년도 내국세 증가분이 반영된 순증분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것이며, 내년도 재원을 당겨서 편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을 통해 ①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우선 사용하되,
 - ②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성이 큰 시설비 투자 및 ③ 교원 명퇴 추가 수용 등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 부총리-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7.20), 부감회의(7.27), 교육청 예산과장회의(8.4)

□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교부금 증액분을 통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도별 추경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교부금 재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경 지연으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또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의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교육정책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계획 포함) : 총소요액 4조 155억원 중,
2조 9,014억원(72.3%) 편성, 1조 1,141억(26.8%) 미편성

□ 이에, 교육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바에 따라 8월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 증액된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참고 1

2016년 추경 예산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총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조 9,331억원 증액

(단위: 억원)

구 분	'15년 예산	'16년 예산				
		본 예산		추 경		
			'15년 대비		본예산 대비	'15년 대비
총 계	394,056	412,284	18,228	431,615	19,331	37,559
□ 보통교부금	380,186	397,841	17,655	416,399	18,558	36,213
□ 특별교부금	13,870	14,443	573	15,216	773	1,346
- 국가시책 (60%)	8,322	8,666	344	9,130	464	808
- 지역현안 (30%)	4,161	4,333	172	4,565	232	404
- 재해대책 (10%)	1,387	1,444	57	1,521	77	134

□ 보통교부금 : 1조 8,558억원 증액

○ 내국세분 : (9조 5,370 억원* × 20.27%) × 96% = 18,558 억원

* 추경시 내국세 증액 조정분

※ '15년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조정분(△3,800억원)은 금회 미반영 ('17년 예산 반영)

○ 교육세분 : 0백만원 (추경시 변동 없음)

□ 특별교부금 : 773억원 증액

○ 국가시책 : (9조 5,370 억원 × 20.27%) × 4% × 60% = 464 억원

○ 지역현안 : (9조 5,370 억원 × 20.27%) × 4% × 30% = 232 억원

○ 재해대책 : (9조 5,370 억원 × 20.27%) × 4% × 10% = 77 억원

□ 집행용도

① 누리과정 미편성액 해소(법정의무 이행)에 최우선 사용

② 경기부양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③ 신규교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원 명퇴 수용

참고 2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지역	교육청 편성 개월 수(계획)		지자체	주요 동향 변동(교 : 교육청, 지 : 지자체)
	유치원 (계획)	어린이집 (계획)	어린이집(계 획)	
대구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5)
울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2.26)
경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4)
충남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19)
대전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5.27)
부산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6.30)
충북	12	12	12	(교, 지) 전액편성(7.20)
세종	12	10 (12)	12	(교) 어린이집 잔여 2개월분 예비비로 집행 예정 (지) 정상집행
인천	11 (11)	11 (11)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 집행
제주	12	9 (9)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 집행
경남	12	8 (8)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 집행
전남	12	5 (5)	12	(교) 추경 예정이나 구체적 일정 미정 (지) 1~3월 정상집행, 교육청 교부 예산 중 잔여액(2개월*)으 로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12월까지 집행 예정 * 어린이집 전체 예산 2개월 방과후과정비 환산시 약 8.3개월
서울	7.4 (7.4)	7.4 (7.4)	12	(교) 추경 미정 (지) 정상집행(교육청 편성 시 추가 편성)
강원	9 (12)	2.3* (0)	12 (-)	(교) 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 강제 편성 의결 * 방과후과정비 9개월분(어린이집 전체 예산 환산 시 2.3개월) (지) 1~7월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 도지사, 12월까지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방침 결정
전북	12	0 (0)	12	(교) 추경 미정(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1~3월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 도청은 교육감의 강경입장에 따라 선집행에 부정적
경기	8 (12)	0 (0)	12	(교) 추경 미정(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지) 도청, 8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예정 (498억원 규모의 교육협력 예산 선집행)
광주	9 (12)	0 (0)	12	(교) 추경 미정(6.13 유치원 추가 3개월분 의결) (지) 시청, 9월까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 선집행 예정

‘공공기술창업 펀드’ 1,500억원 규모로 조성

- 미래부,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3개 펀드 조성계획 발표
- ‘16년 하반기부터 결성 시작, ‘17년부터 4~5년간 투자 예정

□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가 마련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년부터 1,250억원 규모로 조성된 ‘특구 2차펀드*(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펀드)’가 오는 10월말 투자 종료됨에 따라 총 1,5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창업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8월 29일(월) 밝혔다.

* 총 1,250억원(미래부 250억원, 특구재단 50억원, 정책금융공사 300억원, 모태펀드 125억원, 지자체 352억원 등), 존속기간 8년(투자 ‘12~’16년, 회수 ‘16~’20년)

□ ‘공공기술창업 펀드’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확산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조성 등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정부 연구개발은 양적투자 규모에 비해, 연구결과 활용을 통한 기술이전·창업 등의 사업화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미래부는 작년 5월부터 ‘정부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 금번 펀드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펀드 소요재원은 미래부와 특구진흥재단 출자금 350억원*,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100억원과 지자체, 지역은행, 민간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성할 계획이다.

* 2차펀드에 출자한 300억원과 회수될 수익금 50억원 등 총 350억원을 재투자

- 공공기술창업펀드는 2차펀드와는 달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을 감안해 3가지 펀드로 세분화돼 운용될 계획이다.
 - 3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기반펀드는 창업 2~5년 이내의 공공기술 창업기업에, 200억원 규모의 신성장·특허기반펀드는 성장가능성이 크고 공공특허를 활용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 벤처투자펀드는 창업한지 5년 이상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3개 펀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펀드는 결성 후 보통 4~5년간 투자가 이루어지며, 이어 4~5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공공기술창업펀드 세부 조성계획 》

펀드명	① 공공기술기반펀드	② 신성장·특허기반펀드	③ 벤처투자펀드
투자대상	• 연구소기업,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 신성장·특허활용 분야 공공기술창업기업	• 5년 이상 업력의 공공 기술기반 벤처기업
조성규모	300억원 내외	200억원 내외	1,000억원 내외
주요 출자자	미래부(150억원), 지자체(50억원 내외) 등	모태펀드(100억원), 지자체 중견기업(민간투자자) 등	미래부(200억원), 지역은행, 민간투자 등
추진일정	• 운용사 선정('16.10) • 펀드 결성('17.3)	• KST 창투자 설립 및 운용사 자격획득('16.10) • 펀드 결성('16.12)	• 운용사 선정('17.5) • 펀드 결성('17.10)

【 창업초기(2~5년) 단계 】

① 공공기술기반펀드(300억원)

- 창업한지 2~5년이 된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창업 초기의 공공기술창업기업에게 성장 마중물을 제공하는 펀드로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그간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크게 증가되었

으나,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투자관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벤처투자시장 수도권 투자비율 : ('11) 71.8% → ('13) 73.8% → ('15) 76.9%

* 초기기업(3년 이하) 투자비율 : ('11) 29.6 → ('13) 26.7 → ('15) 31.1%

- 제품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창업 초기기업은 도산 가능성이 커 민간 투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구재단은 9월초, 운용사 공모에 착수해 '17년 3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② 신성장.특허기반펀드(200억원)

- 창업 초기의 공공기술창업기업 중에서도 신성장분야 또는 특허 활용분야에 특화된 펀드로 20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국과학기술지주(KST)가 자회사인 '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KST는 9월 1일(목)까지 홈페이지(www.kstholdings.co.kr)를 통해 대표 펀드매니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 금년 12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 '17년부터 4년간 투자가 이루어진다.

【 성장(5~7년) 단계 】

③ 벤처투자펀드(1,000억원)

-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5년 이상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한 공공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특히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역에 지정된 연구개발

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투자해 지역의 '기술-창업-성장'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 '17년 5월까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여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술력이 뛰어난에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투자하도록 펀드를 운용하겠다”며, “공공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 숙박·쇼핑 부문 평가 기준안과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국회 염동열 의원실(이하 국회)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가 9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최근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의 관광선진국들이 거둔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단일화된 관광품질 인증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문체부와 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새로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굿스테이와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등 기존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련 홍보와 지원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강화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범 운영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로서, 문체부는 국회와 공사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가 한국형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의 실행 모델을 정립하고 품질인증제의 법적 기반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 개최 이후,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강원 지역의 숙박과 쇼핑 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17년부터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대상과 범위를 숙박, 쇼핑뿐만 아니라 음식과 여행상품, 관광안내 등 관광 유관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청회 개요

1. 행사명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
2. 일자/장소 : '16. 9. 5.(월) 10:00-12:0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염동렬 / 한국관광공사
4.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5. 참석대상 : 국회, 정부, 지자체, 언론, 학회, 관련협회 및 업계 등
6. 진행계획

시간계획	소요	식 순	내 용	비 고
09:50~10:00	10'	등 록	참석자 등록	
10:00~10:03	3'	개 회	개회 선언	사회자
10:03~10:10	7	내빈소개	주요 참석 내빈 소개	사회자
10:10~10:25	15'	인사말씀	환영사 축사	국회의원 염동렬 관광공사 사장 정창수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황명선 주요내빈
10:35~11:00	35'	발제	주제발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과 법제화 방안-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11:00~11:50	45'	토론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11:50~12:00	10'	폐회	폐회	

농업·농촌에 활력과 농촌주민에게 생기를 준다.

- 정부 3.0,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2017년도 신규지원 사업 공모 -

《 주 요 내 용 》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선정 공모

- 선정규모 : 12개 시·군 내외
- 공모기간 : '16. 8. 17. ~ 9.30 (45일간)
- 평 가 : '16. 10.10. ~ 10.14. 기간 중 서면평가
- 신청대상 :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시·군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신규지원대상 선정 공모

- 선정규모 : 7개 사업 내외(버스형 3, 택시형 4)
- 공모기간 : '16. 8. 17. ~ 9.23 (38일간)
- 평 가 : '16. 9. 26. ~ 10.5. 기간 중 서면·PT 평가
- 신청대상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과 대중교통 미운행 농촌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등 2017년도 신규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재능나눔 확산을 위해 '13년 도입되어 올해로 4년째이며,

○ 그 동안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을 통해서 861개 마을이 수혜를

받았고, 농촌재능나눔 가입자 증가와 농촌재능나눔 인지도가 상승했다.

* 농촌재능나눔 가입자 증가('12) 3만명 → ('16.7월) 5.5만명) 및 농촌재능나눔 인지도 상승('13) 19.2% → ('15) 51.2%)

○ 지자체는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기업체, 대학교·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14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3년째로

○ 그 동안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통해 722개 마을이 수혜를 받았고, 농촌형 교통서비스 이용객의 대중교통 만족도 증가 및 월 평균 외출횟수 증가 등 농업·농촌 주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다.

* 이용주민 대중교통 만족도 증가(시행전 : 41점 → 시행후 : 89), 이용주민 월평균 외출횟수 증가(시행전 : 4.3점 → 시행후 : 8.7)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 법인 등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는 시·군을 통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민간 농식품부 협업의 정부 3.0 정신을 살려 농촌주민 및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개선·지원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17년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개요

□ 지원대상

-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업관련 부서 주관)

□ 사업신청 요건

-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관·기업체, 대학교·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

□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재능나눔 활동
- (지원내용) 재능나눔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회의비 등)
 - ※ 재능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지급비용, 그리고 재능나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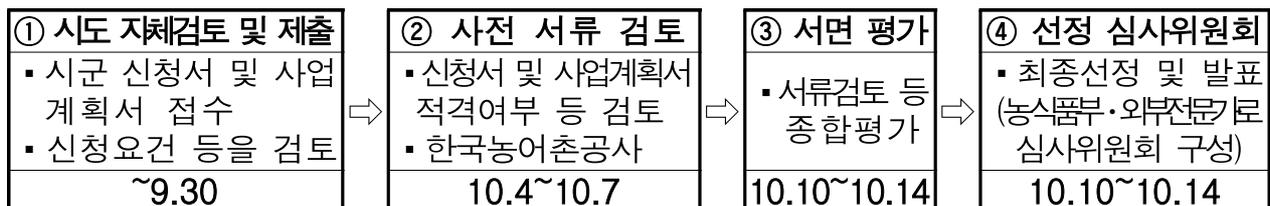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개년('17~'18년)
- 총사업규모 : 600백만원(국고) / 36개소
 - '17년 신규 선정 규모 : 300백만원(국고) / 12개 시·군 내외
 - ※ '16년 선정 24개 시·군의 계속 지원을 위한 예산 제외(약 300백만원)
- 지원금액 : 매년 사업비 총액 2,500만원 기준
 - (1년차) 최대 2,500만원 이내, (2년차) 최대 1,250만원 이내(2,500만원의 50%)
- 지원기준 : (1년차) 국고 100%, 지방비 0%, (2년차) 국고 50%, 지방비 50%
 - ※ 사업시행 후 2년차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전액(1년차 포함) 환수

□ 선정 목표 : 12개 시·군 내외 선정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선정 절차



참고2 '17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 개요

□ 사업신청 요건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
 - ※ 기 선정·지원 사업('16년 종료 예정 또는 그 이전 종료 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 시·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시·군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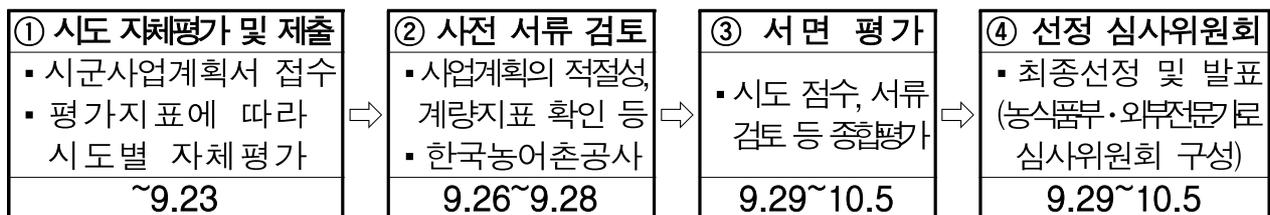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개년('17~'18년)
- 총사업규모 : 900백만원(국고) / 18개소
 - '17년 신규 선정 규모 : 385백만원(국고) / 7개 사업 내외 선정
 - ※ '17년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등 50%
 -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선정목표: 7개 사업 내외(버스형 3~4, 택시형 4) 내외 선정(추가 지원 최대 30% 포함)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공모방법 : 시·군이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평가를 통해 버스형 2개 사업·택시형 2개 사업 이내 제출(동일 순위는 무효처리)
 - 단, 추가 지원('16년 종료 예정 및 그 이전 종료 사업)의 경우 유형 구분 없이 1개 사업 제출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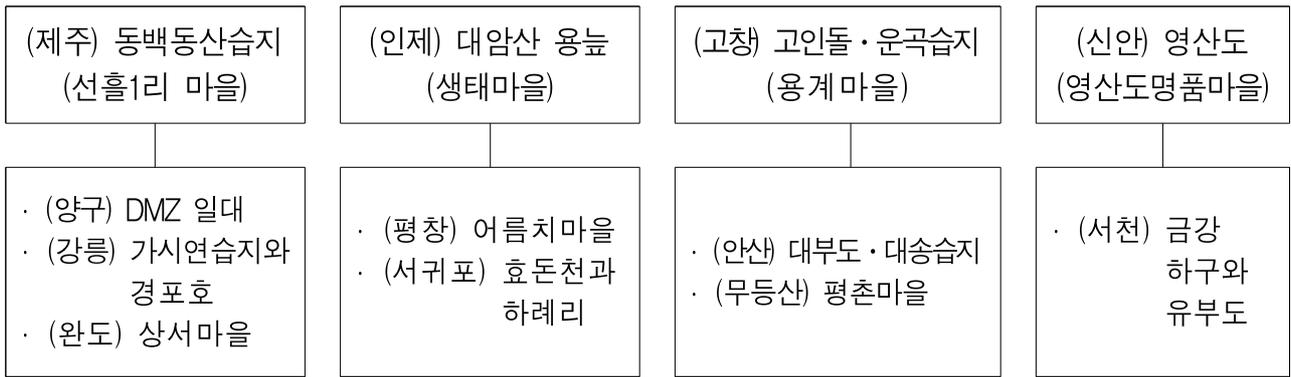


12곳 생태관광지역 마을주민, 자매결연 맺어

- ◇ 마을주민이 생태관광 성공 본보기를 선정하여 자매결연
- ◇ 마을별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확산 기대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30일 충남 서천군 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주 동백동산 등 12곳의 생태관광지역 마을이 참여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한다.
 - *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근거, 올해까지 총 20곳 지정
 - 자매결연을 맺는 12곳의 생태관광지역은 제주 동백동산 습지, 인제 생태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신안 영산도, 양구 DMZ 일대,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무등산 평촌마을, 강릉 가시연습지와 경포호, 완도 상서마을, 평창 어름치마을,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서천 금강 하구와 유부도다.
- 이번 협약식은 생태관광 성공 본보기(모델)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제주 동백동산 등 4곳의 마을과 이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평창 어름치마을 등 8곳의 마을 간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생태관광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협약식에는 12곳 생태관광지역의 주민대표와 지자체 담당자,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협력을 희망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을 선정해 신청하고, 성공모델 지역 주민협의체의 의견과 환경부의 조율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아울러, 한국생태관광협회도 이번 협약에 참여해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간에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태관광지역 자매결연 체결 마을>



□ 자매결연을 주도하는 4곳의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은 제주 동백동산 습지, 인제 생태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신안 영산도이며, 이 4곳은 지난 2014년 환경부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정했다.

○ 특히 이 4곳은 지정 이전인 2013년에 비해 2015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평균 54.9%가 늘어나고 생태관광 소득도 55%나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 자매결연 신청 희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주 동백동산의 경우, 마을 주도의 생태관광 성공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생태관광 조례를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

○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도 생태관광 활성화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면서 전라북도에서 지난해 4월 도(道) 전체의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관광을 협력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행사 개요 및 협약서 주요 내용.
 2. 생태관광 자매결연지역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 행사 개요

- 일시 : 2016. 8. 30(화), 11:00~13:00
- 장소 : 서천 청소년수련관 서천마루 대강당(2층)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부 / (주관) 한국생태관광협회
- 참석대상 :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명품마을 담당),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주민 및 지자체 관계자,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문가(컨설팅 위원 대표) 등 약 100명

□ 협약서 주요 내용

- 4개 성공모델지역의 추진 우수사례 확산 노력
 - 우수성과, 실패 및 극복사례 등 그간의 노력 전파
-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소통 활성화·아이디어 창출 등 상호발전 노력
- 우수 협업모델 창출을 위한 한국생태관광협회의 지원
- 생태관광의 전국적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

	지역명	개요
1	 <p>제주-동백동산습지 (성공모델 육성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숲, 선홍꽃자왈 동백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산림유전자원지역 등으로 지정 • 프로그램 :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눈 내리고 동백꽃 피다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백동산습지센터 064-784-9446, www.ramsar.co.kr -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77 동백동산습지센터
2	 <p>인제-생태마을(용늪) (성공모델 육성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이 내린 터, 인제 생태마을(용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천연보호구역 등 군면적의 33%가 보호지역 • 프로그램 : 대암산 용늪 생태체험 등 3개 생태마을 (용대리 백담마을, 신월리 달뜨는 마을, 월학리 냇강마을) 체험프로그램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하늘내린인제로컬투어사업단, 033-463-8680 http://www.injetour.co.kr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하늘내린센터 4층
3	 <p>고창-고인돌·운곡습지 (성공모델 육성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 자연의 신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과 연계하여 생태와 역사문화 탐방 • 프로그램 : 운곡습지 힐링여행, 고인돌 사적 탐방, 원시인 체험, 용계마을 주변 생태체험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063-563-6664, www.ungokecotour.co.kr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송암길 170-64, 고창 운곡습지 탐방안내소
4	 <p>신안-영산도 (성공모델 육성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영산도 명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8경, 풍란, 석곡 등 자원 보유, 섬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한 예약체계 도입으로 환경수용력 (40~50명/일) 고려한 운영 • 프로그램 : 나만의 12가지 휴식(바다 숲 힐링, 벽화길 투어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061-284-9116, www.yeongsando.co.kr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흑산도 여객선터미널

5	 <p data-bbox="331 533 576 568">양구-DMZ 일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역사와 생태가치의 공존, 양구 D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으로 전구간이 보호구역. 평화누리길, 두타연안보관광지, DMZ야생 동물생태관, 편치불 돌레길, 산양증식장, 생태식물원 등 ● 프로그램 : DMZ 생태탐방 투어, 안보체험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구 DMZ 생태관광협회, 033-481-3822, - 찾아오실 곳은 예약시 협의하여 선정
6	 <p data-bbox="236 996 676 1032">평창-어름치마을(백룡동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모험이 함께하는 곳, 평창 어름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서식,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 ● 프로그램 : 별이 빛나는 밤에 생태탐사(백룡동굴, 칠족령 트레킹, 백운산 탐방, 동강 래프팅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어름치마을 영농조합법인, 033-332-1260, 어름치 마을(www.mahari.kr), 백룡동굴(cave.maha.or.kr)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
7	 <p data-bbox="256 1456 651 1491">서천-금강하구와 유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들의 보금자리, 서천 금강하구와 유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부도와 금강하구갯벌은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이며, EAAFF서식지로 등재 ● 프로그램 : 서천 어디갈까?(신성리 갈대밭, 철새도래지, 국립생태원 등), 사계절 서천철새여행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041-956-4002, http://bird.seocheon.go.kr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8	 <p data-bbox="288 1948 619 1984">안산-대부도·대송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활한 서해 갯벌,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0km²의 광활한 갯벌, 연장 100km에 이르는 수려한 해안선과 갯벌을 가진 대부도는 수도권외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대송습지) ● 프로그램 : 철새탐조, 갯벌체험, 대부해솔길 7개코스 트레킹(74km), 해양생태마을 투어, 누에섬 기행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도관광안내소 1899-1720, 대부도생태관광협의체 032-890-4850, daebudotour.com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대부도 관광안내소

<p>9</p>	 <p>강릉-가시연습지와 경포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서 문학과 철학의 뿌리를 만나다, 강릉 가시연습지와 경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포호(석호), 가시연습지, 순포습지 복원지, 송림 등 생태자원과 오죽헌·선교장, 바다·석호·습지가 어우러진 도시 속 생태관광지 • 프로그램 : 가시연습지, 경포호, 송림길, 녹색도시 체험센터, 철새 탐방 프로그램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생태관광협의회, 033-648-3390
<p>10</p>	 <p>서귀포-효돈천과 하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돈천의 선물,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서귀포 바다로 유입되는 효돈천(13km)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 쇠소깍(명승), 효돈천 계곡 주변의 난대식물대, 활엽수림대 등 한라산의 다양한 식물자원 보유 • 프로그램 : 오감만족 내창 트레킹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례리 생태관광마을협의회, 064-767-0144, ecori.co.kr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하례리마을
<p>11</p>	 <p>완도-상서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상서 명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재 제279호인 마을 돌담길, 매봉산 탐방로, 다랭이논, 구들장논 등 자원 보유, 순환버스 등을 통해 탐방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 - 프로그램 : ‘슬로시티, 청산에 살으리랏다’, 마을 돌담길 탐방, 휘리물고기 잡기 체험 등 운영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서마을, 061-554-5474, www.sangseovillage.co.kr - 전남 완도군 군내리 1255 완도연안여행객센터미널
<p>12</p>	 <p>광주 북구-평촌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산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딧불이·수달 서식, 광주충효동요지(사적 제141호) 등 자원 보유 • 프로그램 :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평촌마을 힐링여행’, 반딧불이 관찰체험, 정월대보름행사, 도예체험 등 • 예약 및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조합, 062-266-2287, www.bandivill.net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1.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이란?

- 전북 고창 용계마을(고인돌·운곡습지), 제주 제주시 선흘1리(동백동산습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전남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
- 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부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명품마을 등 생태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에 성공모델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중

2.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의 실질적 성과는?

- 아직 진행 초기로서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나,
- 지정 이전('13년) 대비, 관광객과 관련 소득이 각각 55% 정도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15년말 기준)

구분	관광객(천명) / '13년 대비 증가율(%)			소득(백만원) / '13년 대비 증가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계	33.9	39.0 (15)	52.5 (54.9)	874.1	1,139 (30.3)	1,354.7 (55.0)
인제	8.4	8.5 (1.2)	8.7 (3.6)	161.8	200 (23.6)	254 (57.0)
고창	5.3	9.6 (81.1)	17.2 (224.5)	91.2	110 (20.6)	172 (88.6)
영산도	3.0	3.3 (10.0)	4.2 (40.0)	136.0	138 (1.5)	192 (41.2)
제주	17.2	17.6 (2.3)	22.4 (30.2)	485.1	691 (42.4)	736.7 (51.9)

○ 생태관광

-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고 해설과 교육을 포함한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책임있는 여행”이라는 개념*이 공유되고 있음

* 국제생태관광협회(TIES, www.ecotourism.org) 참조

- 대중관광(mass tourism)의 폐해를 해소하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의 하나로 대두된 생태관광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원보전과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함

○ 생태관광지역 지정

-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협의체 운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교로 확대!!

- 공업분야에서 IT, 서비스 등 非공업분야까지
- 1학년(2학기)부터 참여 허용
- 청년의 조기 진로 탐색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강화

-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에는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운영된다.
- 교육부(부총리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8월 19일(금), 현재 운영중인 도제학교 60개교에, 특성화고 140여 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17년까지 200개 도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 <확산계획> (‘15) 9개교, 503명 →(‘16) 60개교, 2,674명 →(‘17) 200개교, 7,000여 명
- 특히,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기존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 전 교육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4.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을 계기로 본격 도입된 제도로써,
- 독일·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정책이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5년 특성화고 9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 830개 기업에서 2,67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 또한, 도제학교는 지난 7월 22일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총847개 직종)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교육 훈련(Dual System)을 참고하여,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모델

- 2년 여간 도제학교를 운영해온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의 직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직업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얻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 '15년 도제학교로 선정된 '인천기계공업고'의 경우 학생이 일주일 중 3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2일은 기업에 가서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를 활용하여 실습에 참여하면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 담당 교사들은 도제학생들의 기술 수준이 학교수업만 받은 학생보다 탁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참여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미리 결정하여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등 만족도가 높아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 * 참여기업 4.0점, 학습근로자 4.08점, 기업현장교사 3.97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15년)

현장의 목소리

- ◆ 조00 학생 (18세, 남, 인천기계공업고 2학년)
 - ▷ 아버지가 다니셨던 학교에서 금형분야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특성화고에 진학했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빨리 배우는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설득해서 일학습병행제(도제교육)에 참여했어요.
- ◆ 권00 학부모(인천기계공업고 심00 학생 모친)
 - ▷ 처음에는 사회 경험이 없는 아들이 일과 공부를 잘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해요.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도제훈련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 도제학교 학생들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재교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고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제도 도입의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천일엔지니어링(15년 참여)은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도제학교 협약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4명의 학생(학습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다.
- 25년 이상 경력의 기업현장교사가 NCS를 기반으로 편성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기업현장교사를 롤모델로 삼아 해당 분야 최고의 명장을 꿈꾸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 조환수 대표(남, (주)천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신입 직원의 역량을 알기가 어려웠고 기술도 다시 가르쳐야 해서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는 젊은 학생을 채용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전반적으로 학습분위기가 형성돼서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곽00 부장(남, (주)천일엔지니어링 기업현장교사)

“제가 기술을 배울 때는 현장 선배들의 노하우를 어깨너머로 어렵게 배웠는데 지금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회사가 훈련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으니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훌륭한 기술인으로 성장할 후배들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인근 폴리텍대학에서 최신 기술을 열심히 습득하면서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현재 60개교에서 200여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발표하고, '16.9.21까지 공모에 들어간다.

* '16.7.14(목), 8.9(화) 사업단 선정 사전 설명회 개최

< 주요 개편방향 >

구분	현행	개편
① 계열	공업분야	IT, 서비스 등 비공업분야(추가)
② 시작시기	2학년부터 시작	1학년(2학기)부터 가능
③ 교육훈련 기간	2~3학년까지 2년간 운영	분야 특성에 따라 운영기간 다양화 (1.5년~2.5년)
④ 기술 분야	금형, 금속 등 뿌리 산업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新기술 분야(추가) 우대

① **(계열 확대)**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공업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도제학교를 IT·서비스·경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까지 허용하여 비공업계열 참여의 길을 열었다.

* 전체특성화고(465개) 중 상업계 184개교(41.6%), 가사실업계 46개교(8.5%) 등 비공업계가 약 55% 차지

② **(도제교육기간 다양화)** 도제식 교육 훈련기간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2년으로 고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참여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학교와 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1.5년~2.5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기존) 분야 관계없이 2년 기간 운영 → (개편) 세무회계(1.5년), 금융(2.5년) 등 다양화(예시)

③ **(조기 진로 탐색)**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교육훈련을 1학년(2학기)부터 허용하여 학생들의 조기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학교의 학생 선정 및 집중 진로교육, 기업-학생 매칭(면접, 채용 등) 실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④ **(新기술 분야 우대)**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 등 新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참여요건(학생수, 참여기업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기업 인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⑤ **(교사 역량 제고)** 교육훈련 질과 직결되는 학교 교원, 기업현장교사의 역량개발을 위해 NCS기반 교수법, 학생관리 상담기법, 최신 업종 트렌드 및 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 학교 교원 : NCS 기반 교육과정 이해 및 교수 학습개선(심화) 연수 등

* 기업현장교사: 학생 관리·상담 기법, 현장훈련(OJT) 방법 등 연수, 보수교육 신설 등

⑥ **(산업계 참여 강화)** 도제교육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산업별 단체가 직접 공동훈련센터(도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 이를 통해 산업계가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주도하고, 산업별 단체가 보유한 양질의 회원사를 공유할 경우 학교의 기업발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업종별 협회(S/W, 전기, 미용 등), 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등

⑦ **(법제화 추진)** 아울러, 도제교육훈련의 정의, 도제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참여 학생(학습근로자) 보호, 교육훈련 이수 후 자격 취득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제화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국회 제출, 고용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부) 등 제·개정 추진

<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학교와 기업으로 구성)에 시설장비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으로 총 600여 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 교육부(250억원), 고용부(350억원) / 사업단 별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

○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훈련비용과 훈련인프라 비용(기업현장교사, 현장훈련 프로그램, 학습도구 컨설팅)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단은 9월 21일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과 30개 이상의 협약기업 등 신청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 사업공고문은 교육부(www.moe.go.kr) 및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참고 : 도제교육훈련 적합 분야 >

▶ ① 제조업(뿌리산업, 설치산업 등), IT, 서비스 등의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중요산업 분야로서, ②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있고, ③ 경력 개발을 통해 상위기술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하며, ④ 학생·학부모에게 장래 성장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3.0 협업의 대표적 사례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는 청년층의 조기 진로 선택과 노동시장 진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궁극적으로는 도제교육훈련이 정착된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청년 고용률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2015년 기준 청년 고용률(15~24세): 스위스 61%, 독일 45.3% vs 한국: 26.9%
(자료: OECD, Stats.OECD.org)

** G20, OECD 등에서도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제제도 도입을 강조
· G20 고용노동장관회의(‘16.7월) 선언문에 ‘양질의 도제제도 촉진 이니셔티브’ 포함
· OECD, G20, EC 공동 주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도제제도 컨퍼런스”(‘14.4월) 등에서 논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
보도 참고자료

2016. 8. 18.



교육부, 고용노동부

【 순 서 】

1. 일학습병행제 개요	1
참고. 일학습병행제 추진 현황('16.7.28기준)	4
2. 고교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황 및 성과	5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발전 방안	7
참고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현황	11
참고2.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교	12
참고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참여기업 지원내용	13
4. 인천기계공업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현황	14
5. (주)천일엔지니어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현황	15
6. 기타 우수 사례	16
7. 해외 도제훈련 사례	20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의 및 활용	21
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Q&A	23

1. 일학습병행제 개요

□ **개념**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박근혜 정부 핵심개혁과제)

- 현장교사가 기업현장에서 NCS 기반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공동훈련센터,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도제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 추진현황

[그간의 추진 경과]

- ▶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도입 결정(13.6. 국무회의)
- ▶ 「NCS 및 일·학습 듀얼시스템 확산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기업참여 및 공감대 확산 추진(13.12. 국무회의)
- ▶ 「성과제고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마련(14.9. 국가정책조정회의)
- ▶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 마련(15.4. 사회관계장관회의)

○ '16.7월말 기준 7,686개 기업 선정(14년 대비 270% 증가)

-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4,406개 기업에서 학습근로자 21,530명 훈련 중

<일 학습병행제 참여 추이>



○ 졸업생 중심에서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에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

- *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6. 60교), ▲ Uni-Tech('16.16개), ▲ IPP형 일학습병행제('16. 24교)

□ 그간의 성과

1. 단기간內 제도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사업 추진 3년여만에 참여기업은 3.7배, 학습근로자는 6.7배('14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 거양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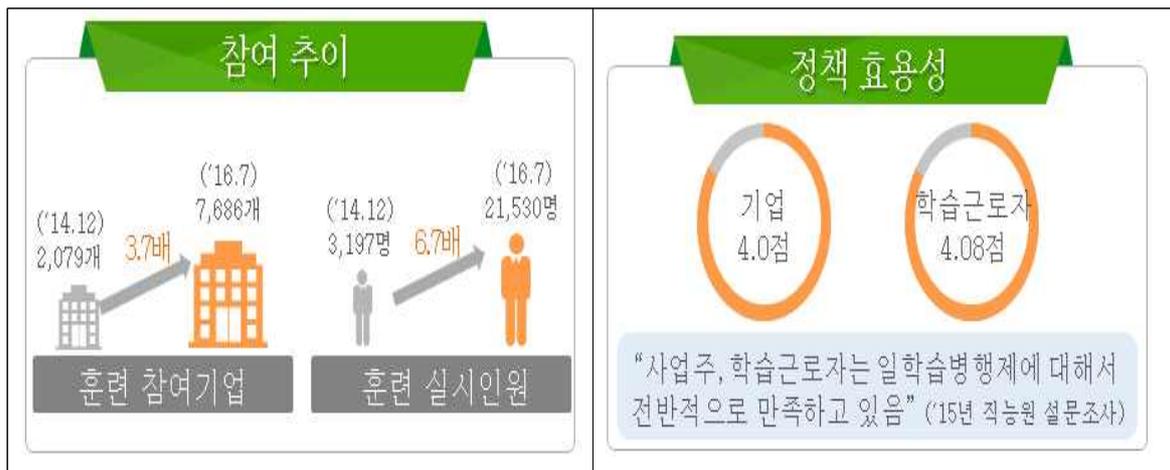
* 참여사업체의 96.2%가 일학습병행제 필요성에 공감('14, 국무조정실 조사)

-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재학생 단계 신규 추진('15년)

2. 제도도입 초기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호응도

- 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등 참여주체의 만족도(4.03/5점)가 높고, 입직연령, 직무능력 향상 등 효과도 높다고 인식

* 참여기업 4.0점, 학습근로자 4.08점, 기업현장교사 3.97점(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년)



- 또한,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63.7%의 높은 인지도를 보이며(특성화고 학생61.8%, 학부모59.6%, 교사93.7%), 87.0%가 ‘청년 취업난 등 해결에 도움 될 것’으로 답변

<출처: 문체부 일학습병행제도 인식조사 결과('15.6월 ~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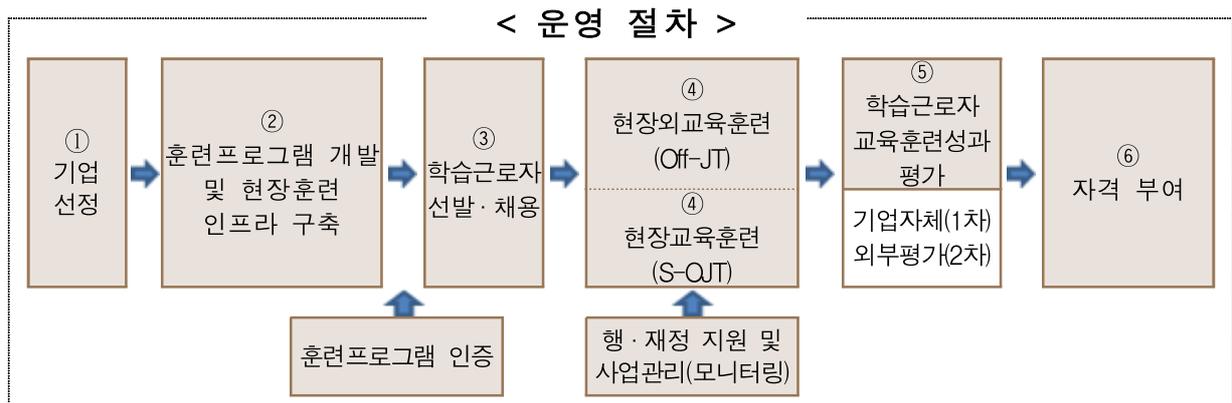
- 최근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16.5월)”에서도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확대 권고

* “Expand Meister vocational schools and the Work-Study Dual System, thereby enhancing links between schools and firms, and basing curriculum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OECD Economic

□ 주요 특징

-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주도
-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 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 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도제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자격의 통용성 확보

□ 운영 절차



□ 지원 내용

<기업 지원 내용>

인프라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기관(ISC 등)에 지원 ○ 1,000인 이상 기업은 지원 제외
훈련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훈련(OJT) 비용 ○ 현장외 훈련(OFF-JT) 비용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월 4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은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제외
기업 전담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장교사 수당(연400~1,600만원) ○ HRD 담당자 수당(연300만원) ○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연수 * 100만원 내외,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은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제외

□ 참여기업 현황

- (선정 현황) '16.07.28.기준 7,686개 기업 참여(9,661개 신청)
 - 현장심사(신용등급) 등 거쳐 우수 기술기업 위주로 선정
 - * 프로그램 인증완료 5,969개소, 훈련실시기업 4,406개소
 - ** 단독기업 1,793개소(23.3%), 공동훈련센터 5,893개소(76.7%)
- (규모별 현황)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다수(95.9%)

(단위-개소,%)

구분		기업 현황			
계		7,686		100.0%	
기업규모 (상시 근로자수)	대, 중견기업	300인 이상		4.1%	
		1,000인 이상		0.8%	
	중소기업	300인 미만		95.9%	
		50인 미만		61.0%	

- (업종별 현황) 기계(로봇) 38.5% > 정보통신 15.0% > 전기전자 13.4%

(단위-개소,%)

구분	기계 (로봇)	정보 통신	전기 전자	화학	문화 컨텐츠	건설	기타	계
선정기업 (비중)	2,960 (38.5)	1,154 (15.0)	1,032 (13.4)	333 (4.3)	267 (3.5)	211 (2.8)	1,729 (22.5)	7,686 (100.0)

□ 학습근로자 현황

- 총 훈련실시 학습근로자: 21,530명 (훈련실시기업 : 4,406개소)
 - 고등학교 졸업생·재학생 비중이 가장 높음(50.8%)

합계	중졸이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대	대졸이상
21,530 (100.0)	151 (0.7)	7,701 (35.8)	3,225 (15.0)	4,013 (18.6)	6,440 (29.9)

- 학습근로자 훈련기간 현황: 평균 16개월

(단위-개소,%)

훈련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24개월 초과	계
기업 수 (비중)	106 (1.4)	5,797 (75.4)	123 (1.6)	1,174 (15.3)	486 (6.3)	7,686 (100.0)

2.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 추진 경과

- '14.1월, 박근혜 대통령, 스위스 베른 상공업직업학교 방문
* “스위스식 학교교육 시스템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한국 교육변화에도 참고할 것이 많다.”
- '14.4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도입’ 계획 발표
- '15.3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개 시범학교(163개 기업, 503명) 운영
- '16.3월, 신규학교(51개교) 등 60개교(830개 기업, 2,674명) 확대 운영

□ 운영 방안

- 고교 2학년부터 기업에 先채용 후,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
- 고교 학력 인정 및 NCS기반 자격 인증 기준에 부합하게 교과과정 편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개요>



□ 그간의 성과

현장의 목소리

【학생】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 ▶ “저는 학업에 충실하지도,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제교육을 시작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현장에 적응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최고 기능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원기계공고 2학년 학생)

【기업】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양성 시스템”

- ▶ “도제학교를 통해 맥이 끊겨가던 **젊은 기술인력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일학습병행제가 유일하다.** 지속적으로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 대표)

【학부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 후 아들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기대”

- ▶ “제 아들이 도제교육을 통해 월급을 받으면서 **땀의 가치를 알아가는 모습**과 향후 15년 후에 **철삭가공 분야의 사업체를 가지겠다는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시화공업고등학교 학부모)

- (노동시장 조기진입) 기업 선채용, 후학습을 통해 입직연령 단축 등 청년층 고용률 제고에 기여
- (직무중심 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 * 2년간 평균적으로 1,297시간이 NCS 기반 과정으로 구성, 이 중 현장훈련은 875시간
- (현장 확산) 2년여간 참여학교(9개→60개교) 및 학생(503명→2,674명)이 크게 증가하고, 기계(금형, 철삭가공) 위주에서 전기·전자, 화공, 자동차정비 등 공업 분야의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
- (높은 만족도)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숙련 기술 습득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 등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 보완 필요사항

- (분야 다양화) 기술전수가 용이한 공업계열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직종 다양화를 위해 비공업계열 특성화고까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
- (탄력성 제고) 교육훈련기간도 일률적으로 2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검토 필요

3. 201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발전 방안

1 도제학교 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 제고

< 도제학교 운영 모델 개선 방향 >

구분	기존 모델	개선 모델
계열	공업분야	IT, 서비스 등 비공업분야(추가)
기간	2~3학년까지 2년간 운영	분야 특성에 따라 운영기간 다양화
기술 분야	금형, 금속 등 뿌리 산업	사물인터넷, 3D 인터넷 등 新기술분야(추가)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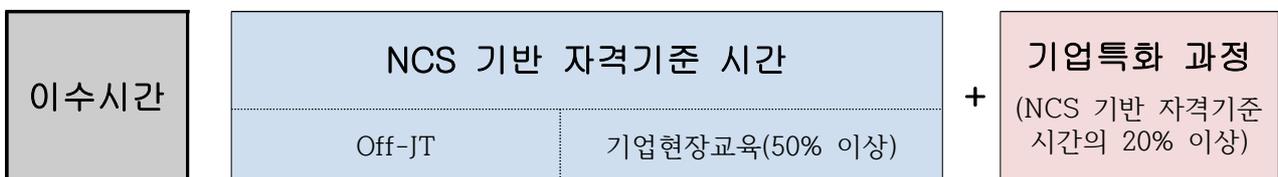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IT·서비스 등 비공업계 전반으로 확산
- 도제교육 참여분야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운영기간 다양화
 - NCS기반 자격 기준 시간을 적용하여 학교 및 기업 특성에 따라 도제학교 운영기간 자율선택 (1.5년 ~ 2.5년)
 - ※ 충분한 숙련 형성기간 확보, 자격응시 준비 기간 확보 등 부담 경감 가능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의 유연성 제고
 - 업종별 일부 직종(상시 10인이상 기업 비율이 15%미만)은 부처 전담기관 등 추천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5인이상 기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 직종별 NCS기반 자격기준*에 따라 최소 이수시간을 차별화 하는 등 합리적 기준 제시
 - * NCS기반 자격 기준: 세무회계L3(734시간), 헤어L3(830시간), 절삭가공L3(880시간) 등

구분	현행	개선
참여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예외적 추천을 통한 경우 10명까지 적용	○ 직종 별 기업규모 분포 고려 * 문화예술·디자인,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조리, 의복 분야 등은 엄정한 현장심사와 추천절차를 통해 5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
도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체	○ 폴리텍(도제지원센터)	○ 학교, 기업, 외부전문가 공동개발 * 도제지원센터는 외부전문가로 개발 지원
도제교육 최소 이수시간	○ 900시간 이상 * 실제 1400시간 이상 편성되어 운영 중	○ 해당 분야별 NCS 기반 자격기준 시간 + 기업특화 과정 (20%)
기업현장교육(OJT) 이수시간	○ 2~3학년 전문교과시간(86단위: 1,462시간) 중 50%이상 편성	○ NCS 기반 자격기준 시간의 50% 이상 + 기업특화 과정

2 도제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체계성 강화

□ 新산업 등 기업현장성 반영 강화

-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新산업(하이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일부 참여요건(학생수, 참여기업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산업환경 및 기업 인력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 기업특화 과정 반영 강화



※ 기업 특화 능력단위 : 해당 종목 외의 NCS 능력단위 또는 기업 자체 매뉴얼 등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 도제교육훈련의 정의, 도제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참여학생(학습근로자) 보호, 교육훈련 이수 후 자격 취득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화 추진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국회 제출, 고용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부) 제·개정 추진

□ 산업계 주도형 운영 모델 도입

- 산업별 단체(산업단지, SC 등)가 주도하여 학교와 사업단을 구성하여 직접 도제교육센터(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는 모델 시범 도입

□ 기업의 교육훈련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 질 관리 유도

- 기업 CEO 대상 도제교육 과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및 기업현장교사 대상 교육 역량 강화 연수 강화

* 기업현장교사: 학생 관리·상담 기법, 현장훈련(OJT) 방법 등 연수과정 운영, 업계 최신 트렌드 등 보수교육 신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 발굴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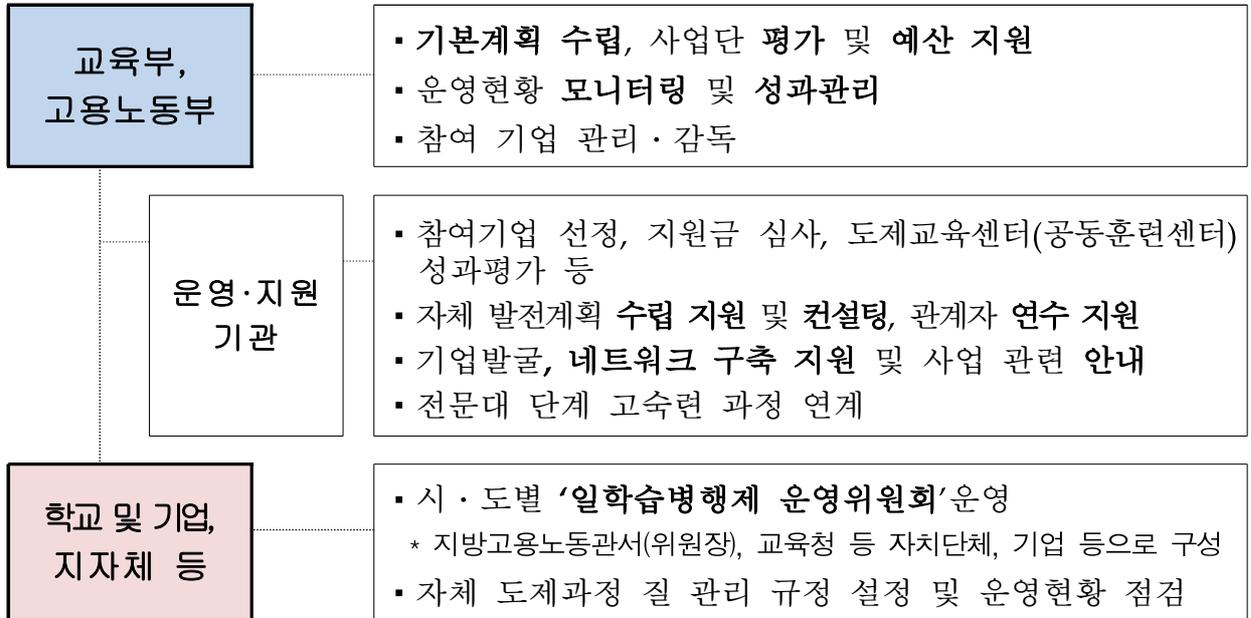
- 우수 사례(스토리텔링 방식)집 발간, 권역별 홍보·설명회 등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성과를 적극 확산
- 지역별 도제지원센터(참여기업 30~50% 발굴지원), 산업단지공단(참여기업 30%이상 발굴지원), 시도교육청(지역 중견기업등과 MOU체결) 등에 기업발굴을 위한 구체적 역할 부여

4

도제학교 질 관리 및 지속적 운영체계 구축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질 관리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리체계 >



- 학교 여건과 기업수요 변화에 따른 도제 사업단 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주기적 컨설팅 제공

※ 직업교육 및 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pool 구축·운영

- 시·도 교육청 및 직업능력개발원, 도제지원센터(폴리텍) 등의 역할 강화

❖ 시도 교육청 역할

- ① 도제학교 사업단 구성 조정, 도제교육 과정 승인 등
- ② 주기적 학교별 현황 점검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③ 시도교육청 주관 정례 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이상)

□ 사업단 선정 개요

○ (선정규모) 40개 사업단 내외

*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선정규모 변동 가능

* '16년도 운영중인 60개교 외에, 140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하여 약 200개교 운영

○ (총 사업기간) '16년 ~ '20년

* 1차년도 사업기간: '16. 10월 ~ '17. 12월

○ (대상) 특성화고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

-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며,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분야) 장기간 인력양성이 요구되는 등 도제교육훈련에 적합한 산업 분야로 청소년 유해·위험사업장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

* 우대분야 : 인근 산업단지집중 업종분야, 뿌리산업 분야(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인력부족 직종분야

< 참고 : 도제교육훈련 적합 분야 >

▶ ① 제조업(뿌리산업, 설치산업 등), IT, 서비스 등의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중요산업 분야로서, ②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있고, ③ 경력 개발을 통해 상위기술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하며, ④ 학생·학부모에게 장래 성장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

□ 추진계획

○ 사업신청 기간 : ~ 9. 21(수)

* 도제 학교 사전 설명회: 7.14.(목), 8.9.(화)

○ 신청서 심사 및 기업현장 실사 : ~ '16. 10월초

○ 선정심사(서면·발표평가) 및 결과 발표 : '16. 10월중

○ 운영 준비 지원 : '16. 10월 ~ '17. 2월

* 프로그램 개발, 학생·학부모 기업견학, 학생-기업 매칭, 기업현장강사 연수 등

○ 도제 교육훈련 실시 '17.3월~

참고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15년 (9개교, 9개 사업단)	'16년 (51교, 16개 사업단)	
서울(10)		성동공업고 용산공업고	(서울아이티고, 영등포공고, 인덕공고, 한양공고) (서울전자고, 성수공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대구(5)	대구공업고	경북공업고	(경상공고, 대구서부공고, 조일로봇고)
인천(4)	인천기계공업고	부평공업고	(청학공고, 도화기계공고)
광주(2)	광주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대전(3)		대전전자디자인고	(경덕공고, 계룡공고)
세종(1)		세종하이텍고	
경기(8)	시화공업고 안성두원공업고	부천공업고 경기자동차과학고 평촌공고	(산본공고, 김포제일공고) (부천공업고, 산본공고) (부천공업고, 군자공고)
강원(3)		원주공업고,	(영월공고, 강릉중앙고)
충남(5)		운산공업고 천안공업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운산공업고, 아산전자기계고, 충남조선공고, 논산공고)
전남(10)	광양하이텍고	목포공업고 영암전자과학고	(해남공고, 진도실업고, 구립공업고) (영광전자고, 순천전자고, 정남진산업고, 장성실업고)
경북(4)	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홍해공고, 금호공고)
경남(5)	창원기계공업고	진주기계공업고	(경남항공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계(60)	총 60개교 (단독형 10개, 거점학교형 34개, 공동실습소형 16개)		

※ 도제학교 참여분야(25개 사업단 기준) : 기계(17), 전기전자(5), 화학(2), 자동차 정비(1)

참고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교

구 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유형이 아닌 교육방식)
학교 수 (*16.4.1기준)	47개교	465교	60개교 (특성화고 수에 포함)
운영 범위	학교 전체	학교 전체	특성화고 내 도제교육 적합 학과
재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전액 면제 ◦기숙사 설치 필수 ◦학급당 학생수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료·입학금) 장학금으로 지원 ◦(학교운영비) 학생 부담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도제교육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학생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단위 학생 선발 - 단, 정원 중 일부는 지역 단위 내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단위 학생 선발 ※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전국단위 선발 가능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 1학년생 중 기업견학, 사업설명회를 거쳐 1학년 2학기에 참여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자율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면 운영 -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정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원칙) ◦자율학교로 지정 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운영 자율 ◦NCS 기반의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필요 인력 양성 * 2년간 평균적으로 1,297시간이 NCS 기반 과정으로 구성 ◦학교-기업 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학생은 2~3년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스터고 선정 시 기반 조성금 50억 지원(특교) ◦운영비로 보통교부금 산정 시 9~11억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역량 강화사업, 글로벌 해외인턴십 등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부) 년 20억원 상한 시설장비비·운영비·인건비 지원 ◦(교육부) 특교로 교재 개발비, 방과후 프로그램비, 연수비 등 지원

참고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참여기업 지원내용

대상	지원 내용	세부내용	지원 부처
학생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근로계약 체결로 기업 내 현장교육훈련 기간은 학생이자 근로자 지위 보장 참여기업 및 학생, 산업기능요원 1순위 지정 	고용부 병무청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내 근로 시간(교육훈련시간 포함)을 고려하여 근로 기준법 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
학교	시설 기자재 및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기자재: 연간 10억 한도 일반운영비(인건비포함): 연간 10억 한도 ※ 사업계획서를 매년 심사하여 지원 금액 결정(5년간 연간 20억원 한도) 	고용부
	사업 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관리비 교원연수비 전문교과 교재 개발비 학생·학부모 사업설명회 등 	교육부
기업	훈련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훈련비용 지원 : 직종 및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지원(사업주) *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고용부
	인프라 구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최대 300만원, 개발기관에 지원) 프로그램 개발비(580만원~890만원, 개발기관에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연 400~1,600만원) HRD 담당자 수당 지원(연 300만원 한도) 기업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연수 지원(한국기술교육대학) 	

4. 인천기계공업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현황

- **학교명:** 인천기계공업고(공업계 특성화고)
- **교원:** 교장 윤인문 등 139명
- **학생수:** 정밀기계과(371명), 메카트로닉스과(188명), 자동차테크과(184명), 전기제어과(187명), 건축디자인과(187명), 도시건설정보과(186명) 등 1,332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 '14.11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
- 참여 학생 : 정밀기계과 2개 학년 110명(2·3학년)
- 운영프로그램(협약기업 수): 사출금형제작_ Level 3(34개 기업)
- 운영유형: 주간정시제
 - * 주 2~3일은 기업에서 현장훈련, 그 외 요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 진행

□ 도제 훈련 성과

- 참여 학생·협약 기업의 평균만족도가 높은 편임(4.36점/5점, '15년)

현장의 목소리

1. 유OO 학생 (19세, 남, 인천기계공업고 3학년)

- 도제교육에 참여하기 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 그런데 작년('15년)부터 일학습병행 기업에 나가서 기업 대표님이나 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꼭 남들처럼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
- 금형분야는 기술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어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 금형 분야 최고 명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도제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정밀 금형 제조 회사의 CEO가 되고 싶음

2. 윤인문 인천기계공업고 교장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면서 학교도 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갖출 수 있어 실습 수준을 높일 수 있었음
-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기술수준도 탁월하며, 참여 학생들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5. (주)천일엔지니어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현황

- **사업장명:** (주)천일엔지니어링
- **업종:** 자동차용 금형·플라스틱 제조
- **근로자:** 150명, ▪ **매출액:** 330억원('15년)

□ 일학습병행제 운영 현황

- 훈련 참여 : '15.3월부터 훈련 개시
- 교육기간: 24개월, 1,240시간(기업 OJT 645시간, 학교 OFF-JT 595시간)
- 학습근로자: 4명(인천기계공업고 3학년생 3명, 일반 학습근로자 1명)
- 기업현장교사: 4명(금형 기능장 등)

□ 도제 훈련 성과

- 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우수인재 조기 선점 및 회사 전반적인 학습분위기 형성 등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됨

* 설비종합효율(생산성지표): ('14년, 참여 전) 87% → ('15년, 참여 후) 89%

현장의 목소리

1. 조환수 (주)천일엔지니어링 대표

-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업경쟁력이 좌우되므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기업현장교사와 학습근로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 전반적으로도 학습분위기가 형성되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2. 곽OO 부장(남, (주)천일엔지니어링 기업현장교사)

- 제가 기술을 배울때만 해도 기업에 입사한 후 현장 선배들의 노하우를 어깨너머로 어렵게 배웠는데
- 지금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고 회사가 적극 훈련을 지원해주고 있어 후배들이 더 훌륭한 기술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더 공부해야겠구나 느꼈고 이를 위해 인근 폴리텍대에서 최신 기술도 배우고 있음
-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습근로자 뿐만 기업현장교사, 더 나아가 회사 전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듬

6. 기타 우수 사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 광주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0)

참여학과	기계시스템과, 정밀기계과
참여학생수	105명
<p>◇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직무/ 기간: 금형·절삭가공/24개월(1,135시간 교육) ○ 시간구성: 기업현장교육(708hr) + 학교교육 Off-JT(430hr) ○ 교육방식: 주간정시제(2일 학교, 3일 기업) ○ 주요 참여기업: (주)우성정공, 정원기공(주) 등 33개 기업 <p>◇ 운영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공업고등학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NCS 시범학교로, 공동실습소 운영 및 학교기업 지정 등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공업계특성화고등학교임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교장단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학교이며, 학교 기업(냉동공조 분야) 및 광주지역 기계분야 공동실습소 운영 ○ 전공 기본 실무 기술 배양 운영 사례 「교사-학생 팀프로젝트, 도제 학생 기능경진대회」 ※ 개개인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경진대회 실시와 협력과 상생의 기술 교육의 팀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하루 4시간씩의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초기술 강화 교육을 받음 	

2. 두원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727)

참여학과	기계과
참여학생수	115명
<p>◇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직무/ 기간: 사출금형·절삭가공/24개월(1,326시간 교육) ○ 시간구성: 기업현장교육(824hr) + 학교교육 Off-JT(502hr) ○ 교육방식: 구간정시제(2개월 학교, 2개월 기업) ○ 주요 참여기업: (주)동아, (주)동우테크 등 31개 기업 <p>◇ 운영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친절한 변화 「도제 TF팀 등」 ※ 학교에서 도제부와 별도로 ‘도제 TF팀’과 ‘기계과 교사’들의 모임을 운영하여 학생의 기업 현장 적응을 돕고 있음. 도제 TF팀에서는 팀원당 10명 정도의 학생들을 배정하여 상담을 하고, 기계과 교사들은 교사 1명당 1~2개 정도의 회사를 맡아 학생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취업률 현황) 우수기업 발굴, 학생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가상면접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취업률* 68.1% 달성 * 연도별 취업률: 43.4%(’14) → 38.8%(’15) → 68.1%(’16.1.1.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3. 시화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04)

참여학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참여학생수	103명
<p>◇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직무/ 기간: 기계가공(절삭가공 L3)/24개월(1,494시간 교육) ○ 시간구성: 기업현장교육(750hr) + 학교교육 Off-JT(744hr) ○ 교육방식: 주간정시제(2일 학교, 3일 기업) ○ 주요 참여기업: (주)동우에스티, 경성시험기(주) 등 30개 기업 <p>◇ 운영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목표) MAGIC(Master Apprentice Grow Industry Connec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계산업분야 영(young) 명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장 전문가(장인)와 도제교육 참여 학생을 연결하여 젊은 명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 (MAGIC 기초체험 → MAGIC 순환형 → MAGIC 심화형) ○ (취업률 현황) 우수기업 발굴, 학생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가상면접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취업률* 72.5%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취업률: 68.9%(’14) → 67%(’15) → 72.5%(’16.1.1.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 (지리적 이점) 시흥·안산스마트허브(구 시화·반월산단)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179개의 협약업체와 산학연계를 이루고 있음 ○ (특색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등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기업 >

1. 동신기공(주)(인천광역시 남동구)

업종/생산품	프레스 성형 금속 부품 제조 및 프레스 금형 제조
근로자수	48명 <학습근로자 2명>
<p>◇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직무/기간: 프레스금형제작/24개월 (1,240시간 훈련) ○ 훈련방식: 기업현장훈련 + 현장외훈련 Off-JT(인천기계공고) <p>◇ 도입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인력양성 : 기업현장에 맞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으로 자사 제품 및 작업 환경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 ○ 기업내 세대 교체 : 도제학교 참여를 통해 젊은 인재를 조기 채용하고, 이들에게 정년을 앞둔 퇴직자의 기술·노하우 전수하여 기업 내 세대 교체 추진 <p>◇ 학생들을 활용한 신규기기 도입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학생들의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 ○ 현장외훈련(OFF-JT)을 통해 기업에서 부족한 장비·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기업 기술력 향상. <p>❖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도움이 될까 생각했지만, 현재는 금형업무가 바쁠 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 그동안 교육해 온것에 보람을 느낌”<동신기공 기업현장교사 김00></p>	

2. 아진산업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업종/생산품	자동차 부품가공, 자동차 금형 전문업체 / 자동차차체, 전장
근로자수	680명 <학습근로자 10명>
<p>◇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직무(기간): 절삭가공(2년, 1,377시간), 프레스금형(2년, 1,183시간) ○ 훈련방식: 기업현장훈련 + 현장외훈련 Off-JT(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p>◇ 도입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양성 : 아진산업은 학생들의 기업 현장 적응도와 전문적인 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한 젊은 인력을 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도입 ○ 지역사회 고용 창출 : 아진산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생산 기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통해서 학생들의 조기입직으로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p>◇ 생산성 향상 및 이직률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근로자 교육을 통한 직무 이해도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학습근로자 직무 만족도 상승이 이직률 감소로 이어짐 	

3. (주)동우테크(경기도 안성시)

업종/생산품	자동차 부품 정밀가공 전문업체
근로자수	80명 <학습근로자 5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현황

- 훈련직무/기간 : 절삭가공/20개월(1,326시간 훈련)
- 훈련방식 : 기업현장훈련 + 현장외훈련 Off-JT(두원공업고)

◇ 도입 배경

- 숙련인력 부족 : 정밀 가공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정밀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도제학교 참여
- 젊은 인재 육성 : 자기 계발을 선도로 젊은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여 기술 습득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하고자 도제학교 참여

* 기술이사가 기업현장교사 전담하여 현장훈련 지원으로 학습능률 향상

❖ “기술인력 부족과 구인난을 자체 인력 양성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였고, 학습근로자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현장의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동우테크 대표 전용수>

◇ 생산성 향상 및 장기적 활용

- 학습근로자의 기술 숙련도의 뚜렷한 향상, 품질 평가 향상
- 폴리텍대학 지원 보장으로 학습여건 마련

7. 해외 도제훈련 사례

-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선진국들도 해당 국가 특성에 맞는 도제훈련 제도 운영 중

<해외의 도제훈련 활용 사례>

구 분	독 일	스 위 스	호 주
교육훈련 내용	· 중등교육 단계서부터 정규 직업교육 제도내 도제 훈련이 포함 · 일간정시제, 주간정시제 등	· 중등교육 단계서부터 정규 직업교육 제도내 도제 훈련이 포함 (주중 3~4일 기업훈련, 1~2일 학교교육)	· 학교 기반 도제훈련(정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졸업자, 실업자 등도 참여 가능
운영체계 (거버넌스)	· (연방정부) 훈련 인정, 훈련 관련 규정 수립 등 · (주 정부) 직업학교의 교육과정 제시 · (기업) 훈련과정 수립 등 · (산업별 협회 등) 기업 훈련 감독, 평가 집행, 훈련강사 적성 검증 등	· (연방정부) 도제 훈련 질 관리, 법령 및 평가 규정 제정 등 · (주, Canton) 훈련시행과 관리감독, 기업선정, 트레이너 교육 등 · (전문가 기관) 훈련과정 개발, 자격 및 시험 개발 등	· (연방정부) 도제정책 개발, 호주도제센터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주정부) 도제훈련계약 인증, 자격 관리, 지원금 모니터링 등 · (산업별협의체) 도제 훈련 패키지, 자격 개발 및 보완
참여 현황	· 약 140만명('12년 기준) · 44만개 기업(전체 기업 중 21.3%)('12년)	· 고교단계 직업교육 차지 하는 비중 71.3%('11년)	· 24만명('13년 기준)
훈련기간	· 대체로 3년 * 직종별로 규정	· 장기간(2~4년) * 직종별로 규정	· 장기간(3~4년)
교 원	· 일정 자격을 보유한 트레이너가 사내 훈련 담당	· 일정 자격을 보유한 트레이너가 사내 훈련 담당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훈련 담당
자격과의 연계	· 시험 합격시 자격증(Geselle) 부여	· 2년과정 이수시 연방정부 인증서, 3~4년 과정 이수시 자격증 부여	· 평가후 호주자격체계(AQF)내의 자격 부여
관련법령 및 질관리체계	· 직업교육훈련법 · 연방차원의 직업교육훈련 연구소(BIBB) 발간 독일 직업훈련 규정 및 절차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QualiCarte*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주도의 철저한 질관리체계 구축 * 현장훈련 품질 기준 기업 체크리스트	· 국가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법 2011 등

* 출처: 도제훈련 및 듀얼시스템 관련 해외사례 연구, '14년, 직업능력개발원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의 및 활용

1. NCS 의의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하며,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침서
 - '02년 NCS 개발을 시작으로 '16.7.22(금)에 최종 법제화 완료

2. NCS 개발 과정

-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02년 NCS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3년부터 고용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5년까지 847개 NCS를 개발 완료
 - (현장수요 직접반영) 산업현장의 수요가 잘 반영되도록 1만2천여 명의 산업, 교육현장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
 - (산업체 파일럿 테스트) 분야별 30~50개의 대표기업이 참여하여, NCS 개발에 총 2만7천여개 기업*의견 반영
 - *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상사 등
 - (산업별 인자위 주도) '15년에는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NCS 개발 주체로 선정하여 산업계 주도 NCS 개발 체계 구축
 - * (Industry Skills Council) '15년 기계, 화학, 경영, 금융 등 13개 위원회 선정

3. NCS 공개·검증·보완

- '13년부터 개발된 NCS는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NCS 개선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최종 검증 작업 진행
 - (활용단계 의견수렴) NCS 위키*, 부처·산업계 의견조사 등을 통해 교육·훈련, 채용 등 활용 과정에서의 NCS 개선 의견 수렴
 - * NCS 위키 : NCS 홈페이지의 개선 의견 수렴 창구
 - (검증·보완) 이를 바탕으로 '15년 하반기부터 '16.6월까지 산업계(ISC 등)의 최종 검증·보완* 완료

* (예) 병원행정(건강보험 관련지식 추가), 항공객실서비스(안전안내방송 직무내용 추가) 등

4. NCS 활용 확산 현황 및 계획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올해부터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학습병행 기업 및 공공·민간 직업훈련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에 전면 적용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양성

- ▲ (특성화·마이스터고) '15년 3개교 시범 → '16년 547개교 전면 적용
- ▲ (전문대학) '15년 79개교 → '16년 84개교
- ▲ (일 학습병행기업) '15년 5,764개 → '16.7월 7,686개 → '17년 1만개
- ▲ (공공훈련) '15년 폴리텍 1,698개 과정 전면적용
- ▲ (민간훈련) '15년 6,279개 과정 → '16년 2만여개 과정(전체)

<교육·훈련 활용 사례>

- ▲ 양영디지털고는 4개 전 학과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 → 양영고 졸업생을 채용한 IT 기업 솔루션(주)는 대졸자 대신 특성화고 졸업생만 채용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

○ 국가기술자격에는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미용사(일반) 등 30개 종목이 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

* 과정평가형자격 :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

* '15년 15종목 52개 과정 → '16년 30종목 129개 과정 → '17년 61종목(누적)

<자격 활용 사례>

- ▲ 폴리텍 남인천캠퍼스에서 운영하는 NCS 기반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과정을 통해 24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그 중 22명(91.7%)이 취업
- ▲ (주)우진플라임(기업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출금형산업기사 과정을 통해 7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원 취업 성공

○ 능력중심채용은 올해 230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내년 초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 (공공기관) '15년 130개 → '16년 230개 → '17년 321개(전체)

□ 올해 하반기에는 NCS 기반으로 산업현장에 맞게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주요 Q&A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 도제학교 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은 학생 100명, 30개 기업 참여임
 - 아울러, ①지역별 17개 폴리텍 도제지원센터(참여기업 30~50% 발굴지원), ②산업단지공단(참여기업 30%이상 발굴지원), ③시도교육청(지역 중견기업 등과 MOU체결), ④산업별 단체(회원사 참여 촉진) 등과 협업하여 우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이외에도, 우수 사례집 발간, 권역별 홍보·설명회 등을 통해 도제 학교 성과확산 및 기업 참여 유도

2. 양적 확산과 함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있는지?

- 특성화고 교원 대상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도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에 대한 정기 연수를 실시하고,
 - 도제교육 지원기관(직능원 등)을 활용하여 특성화고의 도제교육 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주기적인 컨설팅 제공
 - * 학교 교원 : NCS 기반 교육과정 이해 및 교수 학습개선(심화) 연수 등
- 업무 숙련도는 높지만 강의 등 교육 경험이 부족한 기업현장교사를 위해 현장훈련 방법, 상담 기술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업종 최신 트렌드 등 보수교육 신설·운영(8월~)
 - * 기업현장교사: 학생 관리·상담 기법, 현장훈련(OJT) 방법 등 연수과정 운영, 업계 최신 트렌드 등 보수교육 신설
- 또한, 현장훈련시 활용하는 학습도구(교보재 등)도 기업 맞춤형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학습도구 컨설팅 강화(초기 3개월 → 전체 훈련 기간으로 확대)

3. 도제학교 내에서 도제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방안은?

□ '16년부터는 모든 특성화고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현장직무중심의 실습교육이 강화되는 중

* '16년 신입생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전체 594교 중 547교(92%)에서 실무과목 편성 운영 중, 47교는 NCS 개발 유보로 미편성

- 도제교육 미참여 학생들의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게 운영할 것이며,
- 향후 도제학교 참여 학생 수를 지속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도제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4. 학생들이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동안 도제학교 교사들의 역할은?

□ 도제교육은 학과 내에서도 1~2개 학급만 참여하고 있어 도제교육 미참여 학생들에 대한 NCS기반의 교육과정 등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기업현장교육도 학교정규교육과정의 일환이므로 임장지도, 교사와 기업현장교사 간 **Co-Teaching** 및 기업현장교사의 교수·학습방법, 학생평가 등을 지원
- 특히, 미성년자인 참여학생 보호와 학생상담 및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교육현장을 순회지도함
- 도제교육 참여기업 발굴 및 기업의 도제교육 업무지원 등 업무 범위도 확대됨

일·가정 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CEO 포럼

- '생생동행 장관실' 중소기업 최고경영층과 함께하는 실천결의 -
- 2017년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600개사 신규 확대 추진 -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는 '생생동행 장관실'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층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확산에 나선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8월 30일(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소재) 제1대연회실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CEO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협력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은희 장관은 포럼에 앞서 관련 협회장들과 만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 가족사랑의 날 실천, 일하는 방식 등 기업문화 개선 등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는 정부3.0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에 기반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 날 포럼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친화경영의 저변을 넓히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 특히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를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사후 지원하고 있는 가족친화 직장교육·컨설팅을 안내하여,

인증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며 경영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가족친화 직장교육 강사인 차성란 교수(대전대학교)와, 가족친화 컨설턴트 김도형((주)한국경영법인 대표이사)씨가 패널로 참여해 인증기업 대상 사후지원을 통해 기업이 변화한 사례를 공유한다.

- 이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제 참여를 더욱 확산하여, 현재 702개 수준인 인증 중소기업을 2017년에는 600개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가족친화인증 현황 : ('12) 253개사(중소기업 76개사) → ('15) 1,363개사(중소기업 702개사)

* '17년도 가족친화인증 일정 : 상반기 신청 접수 → 3/4분기 심사 → 12월 인증 최종 선정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 들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직장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지원을 확대해 인증을 받은 후에도 가족친화 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제도적·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행복, 기업성장과 선순환하는 ‘국민행복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CEO 포럼 개최’ 계획(안)
2.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붙임 1 행사 개최 계획(안)

I.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생동행 장관실'
 -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CEO 포럼
- 일 시 : 2016. 8. 30.(화) 14:00 ~ 15:00
-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 대연회실)
- 참 석 : 중소기업 CEO, 실무자 등 70여명 (미정)
- 목 적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CEO 간 네트워킹 강화

- 가족친화경영 실천 CEO 간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킹 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지원 설명 등을 통해 기업의 내실화 노력 유도
-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 강조

○ 진행방식

- 1) 장관님, 가족친화경영 전문가(2인), 사회자 간 대담 및 CEO들의 건의 또는 제언·질의응답 등 발언
- 2) 인증기업 사후관리 지원 안내(가족친화지원센터)
- 3)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정부포상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소개 등

II. 세부 진행 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가족친화경영포럼 14:00~15:00	○ 국민의례	제1 대연회실 (2층)
	○ 내빈 소개 및 참석자 간 인사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담	
	○ CEO의 질의응답 등	
	○ 폐회	
	* 단체사진 촬영	

붙임 2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 (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07.12 제정) 제15조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인증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 부여

* 인증점수 : 100점 만점(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 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점) 중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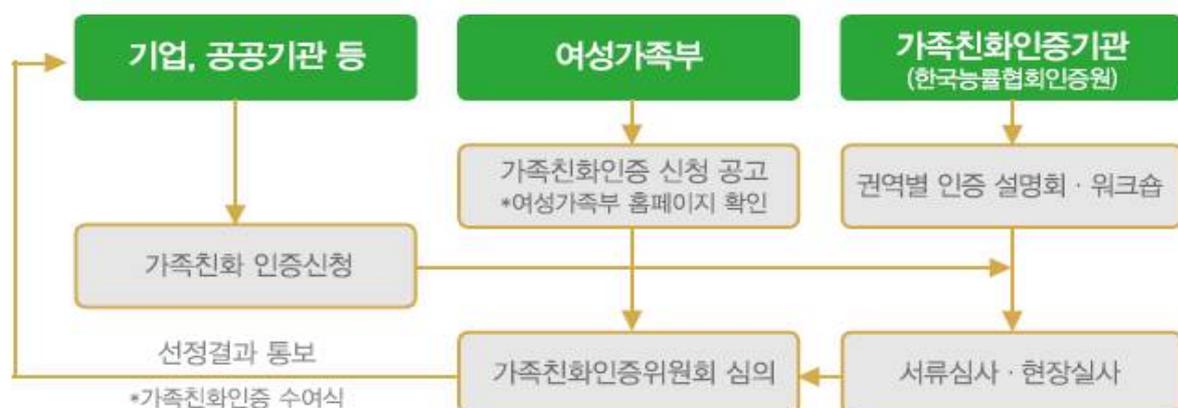
* 인증기간은 3년, 재심사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 (인증 유효현황)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1,363개

(*15.12월 기준)

최초인증연도 \ 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	1,363	258	702	403
2008	9	3	-	6
2009	14	5	3	6
2010	20	6	4	10
2011	86	24	22	40
2012	84	24	13	47
2013	279	84	111	84
2014	444	77	257	110
2015	427	35	292	100

□ 사업 추진체계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 '16.8.3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승인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등의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되어 왔다.
 -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시 적용해 오고 있어 2015.1.1일부터 시행 중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제정('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외부 전문기관에 제·개정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 “회계처리기준”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K-apt 운용)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고,
-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공개초안 예고 및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부에 승인 요청한 개정안에 대해 승인하게 된 것이다.

-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1) 회계처리 기준의 통일

- 기존 17개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의 통일로,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객관성 확보

- | |
|---|
| <p>1. 회계연도의 통일 : 1년(1.1~12.31)으로 일원화('19.1.1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 94%는 역법상 1년(1.1~12.31)을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으나, 약 6%는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p> <p>2. 회계용어의 순화 및 통일 :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하거나 통일함
→ 관리비부과내역서 → 관리비부과명세서, 정정 → 바르게 고침, 갱신 → 새로바꿈,</p> |
|---|

공동주택단지에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2분화
 [일부 시·도에서 복잡하게 세분화(관리외손익을 운영손익, 기타손익으로 세분화 등)
 하던 것을 단순화]

3.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 :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 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작성되는 회계장부의 종류와 명칭이 단지별로 제각각 이어서 감사·감독시 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통일
4. **결산서의 종류 확정**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식,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로 한정하여 관리주체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5. **주식 작성 의무화** : 중요사항에 대한 주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주식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재무제표의 일종
6.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 제시**(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 공동주택 회계담당자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시·도마다 상이한 공동주택 회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을 제시

2)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기준의 강화 및 명확화로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1.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의무화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되, 실무상 빈발하는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 등의 비적격증빙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무상 편의 도모
2. **지출의 원칙 명시** :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기존 지자체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지출시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 공급자가 법인이라도 개인 계좌 및 타사 계좌로 이체요청시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비리·부정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이에 공급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원칙으로 규정

3. 자체 감독기능 강화 :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 **장부의 마감** : 매월 마감 시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잔고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

- **금전의 보관** :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

- **지출에 대한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

- **자산실사** :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

3)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

-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

1. 회계처리 원칙 :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손익(잡수익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 : 현금흐름표의 의무작성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해야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본 기준에서도 현금흐름표 의무작성 제외

3. 관리외수익의 구분 :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여, 관리외수익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맞게 잡수입을 집행하도록 함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일원화 : 정액법(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상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입주자등의 관리비 부담액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 함

○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 보다 내실있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유도하고, 감사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소통 강화로 입주자들의 알권리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1.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 요청시 응하도록 함
→ 감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2. 감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 입수 의무화
→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가 특정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는 서면 진술서를 입수하도록 의무화
 - (확인내용 예시) ▶ 회계감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음
 - ▶ 모든 거래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빠짐없이 반영하였음
 - ▶ 자산·부채는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였고, 누락된 자산·부채는 없음
3.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 금융기관 조회확인 은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감사증거 중 가장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차입금 정보, 담보제공 사실 등)를 감사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회계감사 실효성이 제고되며,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온 잘못된 회계관행의 개선도 기대
4.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명시
→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유용한 정보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달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알권리 및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

□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6.8.31일자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17.1.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한편,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수산모태펀드의 모든 것, 업계에 직접 알려준다

- 해수부, 9월 1일 수산모태펀드 운용사와 투자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월 1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수산모태펀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다양한 경로로 발굴한 유망 어업법인회사 등 수산경영체(4개社)와 수산모태펀드 운용사 4곳이 참여하여 1:1 밀착 상담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9.1(목) 14:00~/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울 여의도 대회의실

** 펀드 운용사 : <기 결성>아이디벤처스, 캐피탈원, <결성 예정>대성, 수림창업투자

수산모태펀드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금 확보가 어려운 유망 수산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펀드다. 동 펀드는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597억 원을 41개 기업에 투자하여 왔다. 그동안 동 펀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자금 지원 절차나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펀드 운용사가 직접 펀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잠재력이 높은 어업경영체와 수산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모태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